
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관련 보고

□ 경 과

- 2004. 7. 1 미국의 9.11 테러 후 ISPS Code 제정 · 시행
- 2007. 8. 3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
제정 · 시행 ('08.2.4)
 - 제42조(항만시설보안료)
: 경비·검색인력 및 보안시설·장비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
항만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
 - 시행 : '10. 8. 4 (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)
- 2010. 8.11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
시행령」 공포 · 시행
- 2010.10.22 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」 공포 · 시행
- 2010.10.25 「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
관한 업무처리요령」 제정 · 시행
- 2010년 경과
 -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관련 이해관계자 회의 (3. 8)
 - 새로운 보안료 부담에 대해 강력 반대
 - 국토해양부, 이용자 부담 최소화 노력 표명

- 시설소유자별 징수여부 조사 (3.10~26)
 - 총 140개 징수대상 업체 중 약 20개사 징수의사 표시
- 선·화주, 부두운영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(6.18)
-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산정방안 연구용역 시행 (5~6월)
 - 목적 : 합리적 징수방안 마련, 이용자 부담 최소화
 - 연구처 : KMI, 부산대학교 공동

☐ 외국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사례

국가	징수근거
미국, EU, 일본, 홍콩	ISPS Code
중국	항만부담금에 관한 규칙('06.4)

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방법·요율 등

- 징수주체
 - 항만시설소유자
 - 부두운영회사
 - 지방자치단체
 - 임대계약 등 합의에 의해 징수주체로 결정된 자
- 납부자 : 항만시설이용자 (선박소유자, 여객, 화주)
- 징수대상시설
 - 계류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

- 항만시설 소유자·운영자가 징수여부를 판단하여 징수
- 다만, 공공부문(지방항만청 관리 공용부두, 국제여객터미널)은 징수하지 않음
- ※ 항만공사 관리부문은 화주에게 경비료를 징수 중

○ 징수요율

- 선박보안료 : GT당 3원 이하
- 여객보안료 : 1인당 120원 이하
- 화물보안료
 - 1) 액체화물 : 10배럴당 5원 이하
 - 2) 컨테이너 : TEU당 86원 이하
 - 3) 일반화물 : 1,000kg당 4원 이하
 - 4)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 : 면제

○ 징수 승인절차

- 징수요율 승인·변경 신청 : 매년 1.1 ~ 4.30 (항만시설소유자)
- 신청승인 (관계기관 협의) : 5월말까지 (지방해양항만청장)
- 승인 유효기간 : 1년 (매년갱신)

☐ 시행 일정

- 2011. 4.30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신청 (항만시설소유자)
- 2011. 5이후 항만시설사용료 징수·시행

□ 향후 계획

○ 2011년 초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

- 협조 :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

[참 고]

1. 15만DWT 선박 1항차 보안료 (MAX)

- 선박보안료 : $75,000\text{GT} \times 3\text{원} = 225,000\text{원}$

- 화물보안료 : $150,000\text{톤} \times 4\text{원} = 600,000\text{원}$

- 합 계 : 825,000원

2. 항만시설소유자 등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기준이 너무 낮다고 불평 중

-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류비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상징적인 수준에서 시행 (이용자측 의견 수용)